

교육·노동부로 나뉜 관리 일원화...사고 재발 막아야

학업계 고교생 꿈 짓받는 현장실습 이대론 안된다

<4> 사고 근절 대책은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18)군 사건을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실습 감독기관 일원화 방안 등을 살펴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광주 기아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A군, 2017년 제주도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프레스기 오작동으로 사망한 이민호군 사고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세웠던 '안전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인권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일보에 '어린 노동자들'이 낯선 현장실습장에 투입됐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학생들 저임금 노동자 전략 안돼 실습생 노동자 인정,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감독 강화 부당 업무 신고센터 마련 필요 "안전 담보 어렵다" 폐지 주장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대책,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노동전문가와 현장 교사, 현장실습 피해학생 유족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들어봤다.

우선, 현장 관리·감독기관의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실습생 신분은 '교육'과 '노동'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부처도 '교육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있다보니 두 부처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실습생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각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현재 현장실습생은 학생의 신분으

로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지는 실정"이라며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 노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전문가들도 현장실습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우선적 관리 감독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국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인 이상현 노무사는 "현장실습처는 영세한 기업이 많은 만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포함, 현장실습생을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 현장 관리감독도 전문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현장실습 선·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수 홍 군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주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안전·근로환경을 총괄하는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되면서 본인 스스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다.

이 노무사는 또 "실습생이 계획서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라면 인식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장실습에 나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선도기업과 참여기업 비교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현장실습 운영기간	1개월(20일) ~ 3개월(60일)	1주(5일) ~ 3개월(60일)
인정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선정절차	현장실사 → 선도기업 협의체 승인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지도점검	필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5조)	
노무사 동행점검	필수(기존선도기업 포함)	학교선택
순회지도	필수	

<전남도교육청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게 된 계기로 꼽히는 이민호군 아버지 이상영씨는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민호군은 지난 2017년 제주도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다.

이씨는 "아무리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이들의 관리, 감독 하에 안전한 현장실습환경이 조성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학교 내 실습현장과 유사한 환경의 실습실을 만들어 취업전문관과 함께 배워나가는 등 학교에서 최대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게 필요"라고 말했다. 현재 현장실습은 현장견학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민호 군 아버지 주장이다.

취업률이 목맨 학교와 교육당국의 선부른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정주 전교조 전남지부 직업교육위원장은 현재 직업계고 교육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취업률로 학교를 서열화해 지원하고 학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법 파견업체'가 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노동인권교육도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편성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수원 온·배수 피해 보상 산정 잘못 많다"

한빛원전 가동 후 343억 지급...영광 어민 불만 끊이지 않아

한빛원전 가동 이후 온·배수 피해를 입은 지역 어민들에게 지급된 피해 보상금이 34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빛원전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의 5개 원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453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 을)의원이 13일 발표한 '2020년 발전 온배수 배출량 및 누적 어업피해 보상현황'에 따르면 한빛원전 가동으로 지난해 발생한 온배수는 71.99억㎥로 조사됐다. 산술적으로 보면 초당 291.6t에 이르는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소 온배수는 급격한 온도변화로 자연 상태의 해양생태계 교란과 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343.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빛원전 인근 영광지역 어민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수원이 56억원을 주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 2005년 내놓은 '영광 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

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 주도로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을 진행, "당시 복사열을 반영해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한 한수원측 용역 결과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와의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비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정호 의원은 "한수원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조속히 피해 어민들의 보상을 완료하고,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 헬스케어 받으세요 13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보건소 직원에게 체지방과 근육 측정 등의 인바디 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취업 청탁 명목 1000만원 받았는데 300만원 벌금형?

법원,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 로비자금 못미친 벌금 "글썸요"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로비 자금으로 받은 금액에 비해 벌금액이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들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는데,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에 넘겨졌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취업 청탁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 이들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질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전례향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 측은 당시 A씨가 주도적으로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전례향을 선물했고 선물 비용도 남편이 부담했으며 양 의원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의원의 지휘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